

“강제징용 배상, 10년 전 미쓰비시 협상보다 후퇴”

일본 시민단체 광주서 회견

민간단체-미쓰비시 협상안 공개 사실 인정하고 사죄문안 제시도 “한국 정부 배상안 듣고 화났다”

지난 6일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 국내 재단이 기업의 출연금을 조성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배상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10여년 전 한·일 소송 지원단체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과 직접 수차례 협상을 벌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상 내용에는 미쓰비시 측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사과문안을 제시한 내용도 있어 “민간인들은 사죄를 이끌어냈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을 보호한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지원회)은 9일 오후 2시께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를 두고 미쓰비시와 16차례 진행한 교섭 내용이 공개됐다.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섭을 진행한



나고야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강제동원 현안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협상단은 나고야지원회 3명(다카하시 나고야지원회 대표와 변호사 2명)과 한국대표 2명(이상갑 전 시민모임 자문위원, 이국인 시민모임 대표)으로 구성됐으며 총 16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협상단은 당시 △강제징용과 임금 미지불 등의 사실을 인정할 것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죄 △미발입금 및 유자료 등의 금전 지불 △근로정신대 사건 관련 기념비 건립 등을 미쓰비시 측에 요구했다.

지난 2008년 11월11일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원고(강제징용 피해자)가 패소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에서는 미쓰비시가 강제연행 및 노동, 임금 미지불 등이 불법행위임을 인정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판결주문을 존중한다(사실 인정)”며 “미쓰비시는 전쟁 중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힘든 고생을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공식적 사죄)”는 내용의 문안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았다.

다만 금전안을 제시하라는 협상단의 요구에 미쓰비시가 “배상은 한일정구권 협

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거부했다. 대신 미쓰비시는 7차 교섭에서 배상 대신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지원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마지막 16차 교섭 때까지 금전안으로 한국 유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를 줄곧 제시해 왔다.

결국 금전 지급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단은 2012년 7월 교섭을 최종 결렬시켰고 이후 10월에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소했다.

주목할 점은 10년 전에 진행된 민간인 단체의 협상이 지난 6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안보다 더 낫다는 점이 다.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지원회 대표는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듣고 매우 화가 났다. 피해국 정부가 할머니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말이 되냐”며 “가해자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다. 가해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일 양국에서 거론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준비 중이다.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10여년 전 미쓰비시와의 협상장에서 제시된 금전안이 다시 언급됐고 심지어 한국정부가 이를 추진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이라고 말하지만 역사를 뒤로하고 책임을 묻지 않은 미래는 또 다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국인 시민모임 대표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는 등 10년 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는 11일부터 제3자 배상안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생활기록부 조작, 사실 아니다”

김진구 협치진흥원추진단장 해명 당시 49건 모두 누락 등 오류 보완 “견책 처분... 조작이었으면 파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 김진구 단장 임용예정자가 본인을 둘러싼 ‘생활기록부 조작’ 논란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4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 신임 단장에 김진구 전 상일여고 교장이 최종 선임됐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장 합격자가 발표되자, 일부에서 “김 단장은 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했다.

한 교육시민단체는 “김 단장이 지난 2010년 상일여고 교장 당시 교사들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접속해 성적 우수학생의 생활기록부를 46건이나 조작하도록 지시, 이로 인해 2021년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부당 징계 지시는 종합의견 10건, 진로지도 3건, 독서활동 28건, 특별활동 5건 등 총 4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신임 단장은 “40여 년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생기부 조작 및 성적 조작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교장의 생활기록부 보완지시에 따라 상일여고 2학년 학생 450명의 전체 생활기록부 3500매를 한 달 가량 꼼꼼히 확인했다”며 “(감사에서) 문제가 된 46건 모두 생활기록부 내용 누락과 오타자, 문맥 오류 등을 수정·보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학급 학생들의 독서이력철이 통째로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마음에 정정한 것인데, 성적 조작으로 비춰져 당혹스럽다”며 “당시 교감으로서 모두 책임지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만약 4

대 비위 중 하나인 ‘성적 조작’이었다면, 파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원한 건데, 이런 논란이 불거져 매우 안타깝다”며 “새 기관 출범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광주 협치교육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1978년 고흥 녹동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 상일여고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일신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 단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이다.

양기람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